

울산 복구 복지사업 현황

-장애인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-

주은수(울산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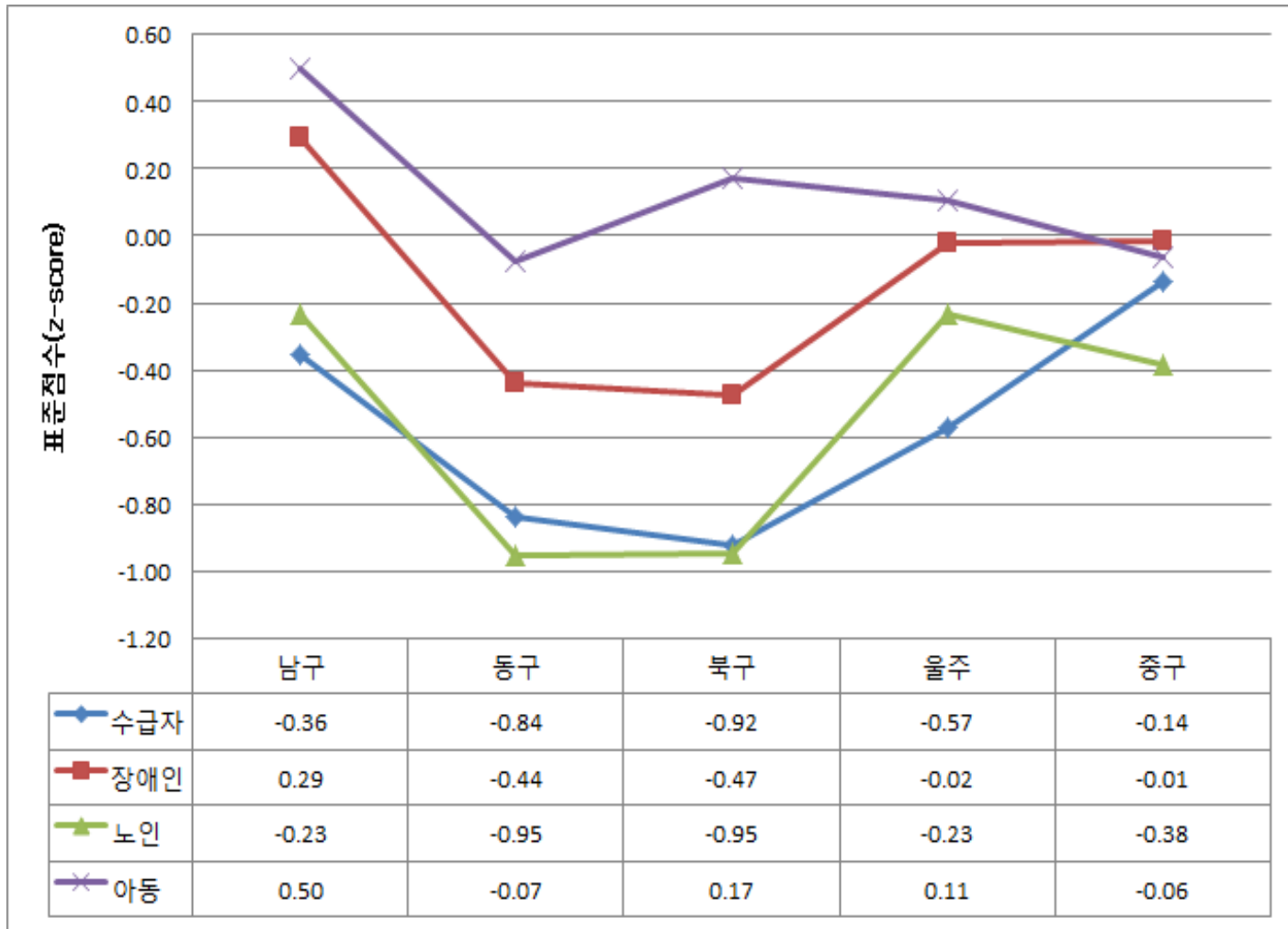
eunsu@ulsan.ac.kr

www.facebook.com/eunsu.ju

울산 북구 장애인복지사업 분석

- 분석 대상
 - 2013년에 시행된 복지 사업
 - 중앙정부, 울산시, 북구, 민간의 사업 모두 포함
- 분석 방법
 - 사업을 내용과 대상 등 특성에 따라 구분
 - 사업 주체를 중앙정부, 울산시, 북구, 민간, 기타(교육청 포함) 등으로 구분
 - 사업 주체에 따라 특성별 사업에 투입된 총예산과 시행 사업수 비교 분석

울산광역시 구군별 복지대상자의 상대적 인구 비중



서비스 대상에 따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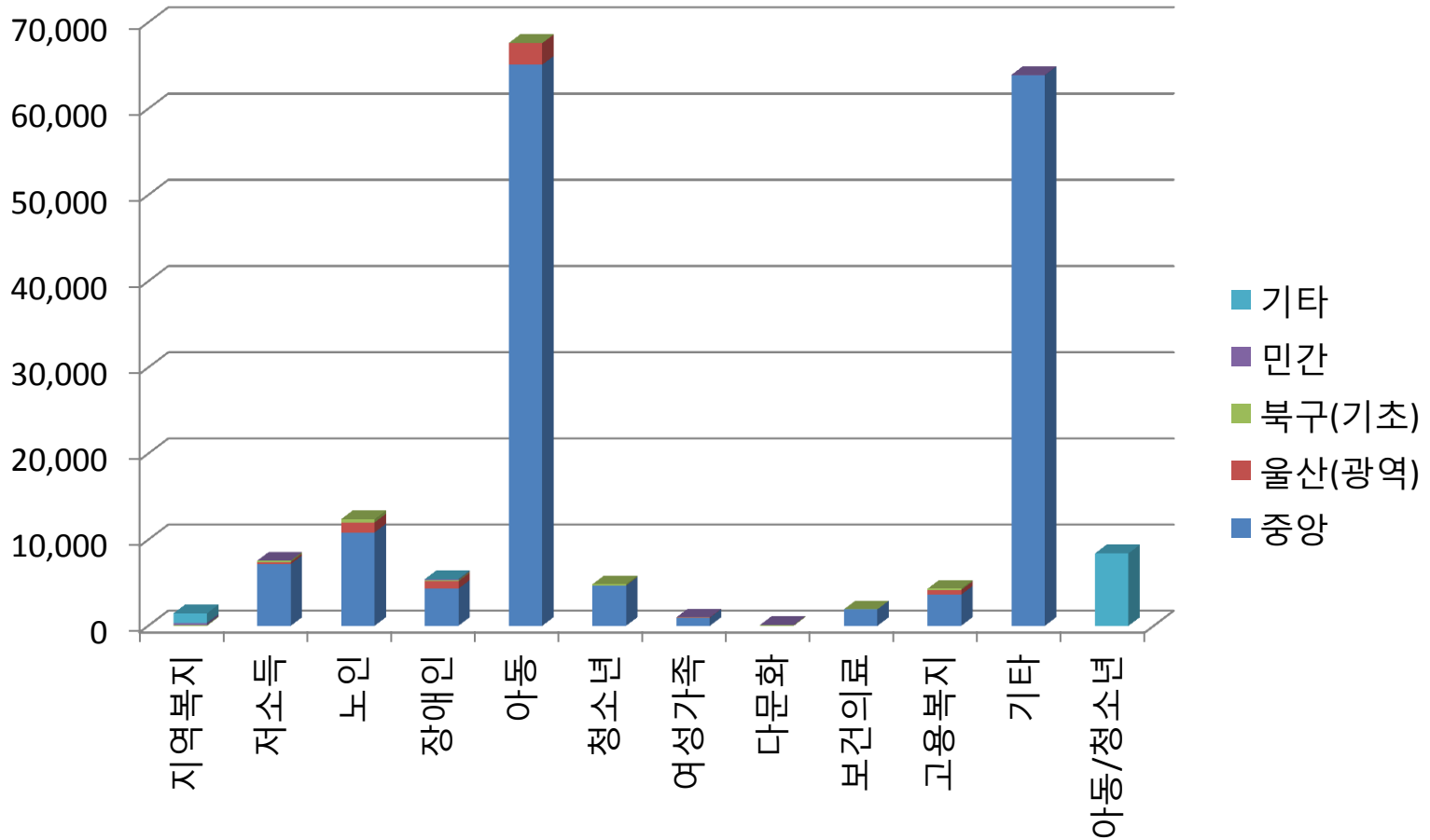
- 아동대상 사업
 -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대상은 아동이었음.
 - 보육료 정책에 따라 아동에게 지급되는 사업 예산의 규모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임.
 - 하지만, 사업수는 장애인 대상 사업에 비해 낮았음.
 - 기타 사업으로 분류된 예산의 상당수는 교육청 사업에 투입되고 있으며, 이는 청소년 사업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음.
 - 따라서, 예산 규모에서는 아동/청소년 대상 사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음.
- 아동대상 사업을 제외하면, 노인, 저소득, 장애인 순으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았음.

서비스 대상에 따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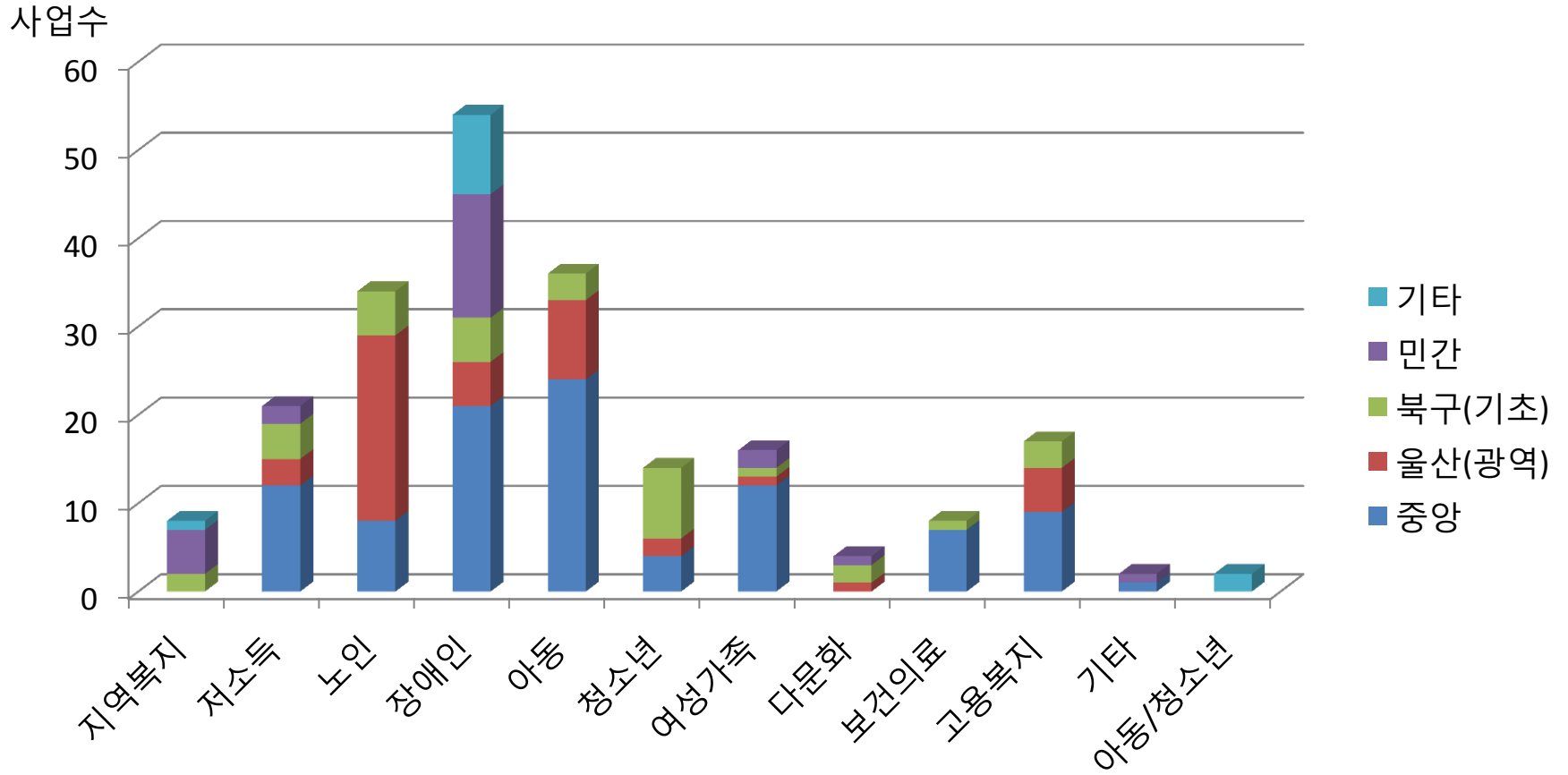
- 울산광역시 사업
 -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수는 노인, 아동 대상 사업의 비중이 높았으며, 투입 예산은 아동, 노인, 장애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.
- 복구청 자체사업
 - 복구청 자체사업은 양적으로는 청소년 대상 사업이 가장 많았고, 노인, 장애인,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비슷한 규모로 시행되었음.
 - 하지만, 예산은 청소년보다 노인 대상 사업에 더 많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.

서비스 대상별 예산

단위: 백만원



서비스 대상별 사업수



사업 내용에 따른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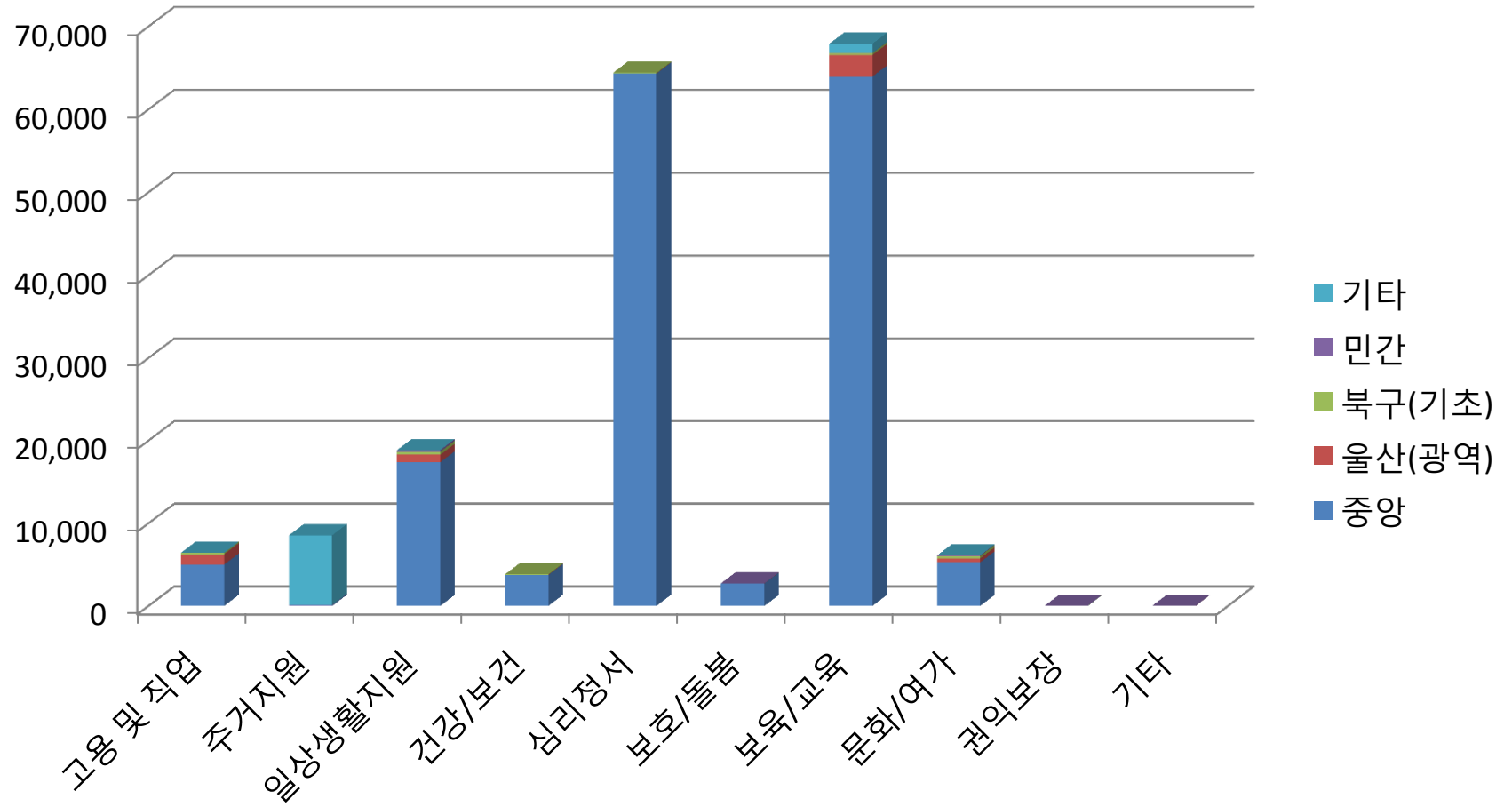
- 행복e음 분류체계의 사업 내용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수와 예산을 분석하였음.
- 보육/교육사업 & 심리정서지원사업
 - 10개 유형의 사업 중 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된 사업임.
 - 이 유형의 사업에는 2013년 한 해 동안 각각 6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음.
 -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복지사업과 보육료 지원사업 등임.
 - 하지만, 투입 재원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복구의 자체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음.

사업 내용에 따른 분석

- 복구 자체예산 투입 사업
 - 고용 및 직업, 일상생활지원, 건강/보건, 심리정서, 보육/교육, 문화/여가 등의 영역에 복구 자체예산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.
 - 하지만, 투입 예산의 규모는 크지 않음. 특히, 중앙정부와 울산시 예산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임.
- 사업의 수
 - 시행 주체에 따라 각 영역별 사업수를 비교해보면, 투입예산에 대한 분석과 달리 중앙정부의 사업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 않음. 중앙정부의 사업은 단일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임.
 - 복구 자체사업수가 높게 나타난 영역은 일상생활지원과, 보육/교육, 문화/여가 영역임.
 - 상대적으로 자체사업의 비중이 낮은 영역은 주거지원, 보호/돌봄 영역으로 나타났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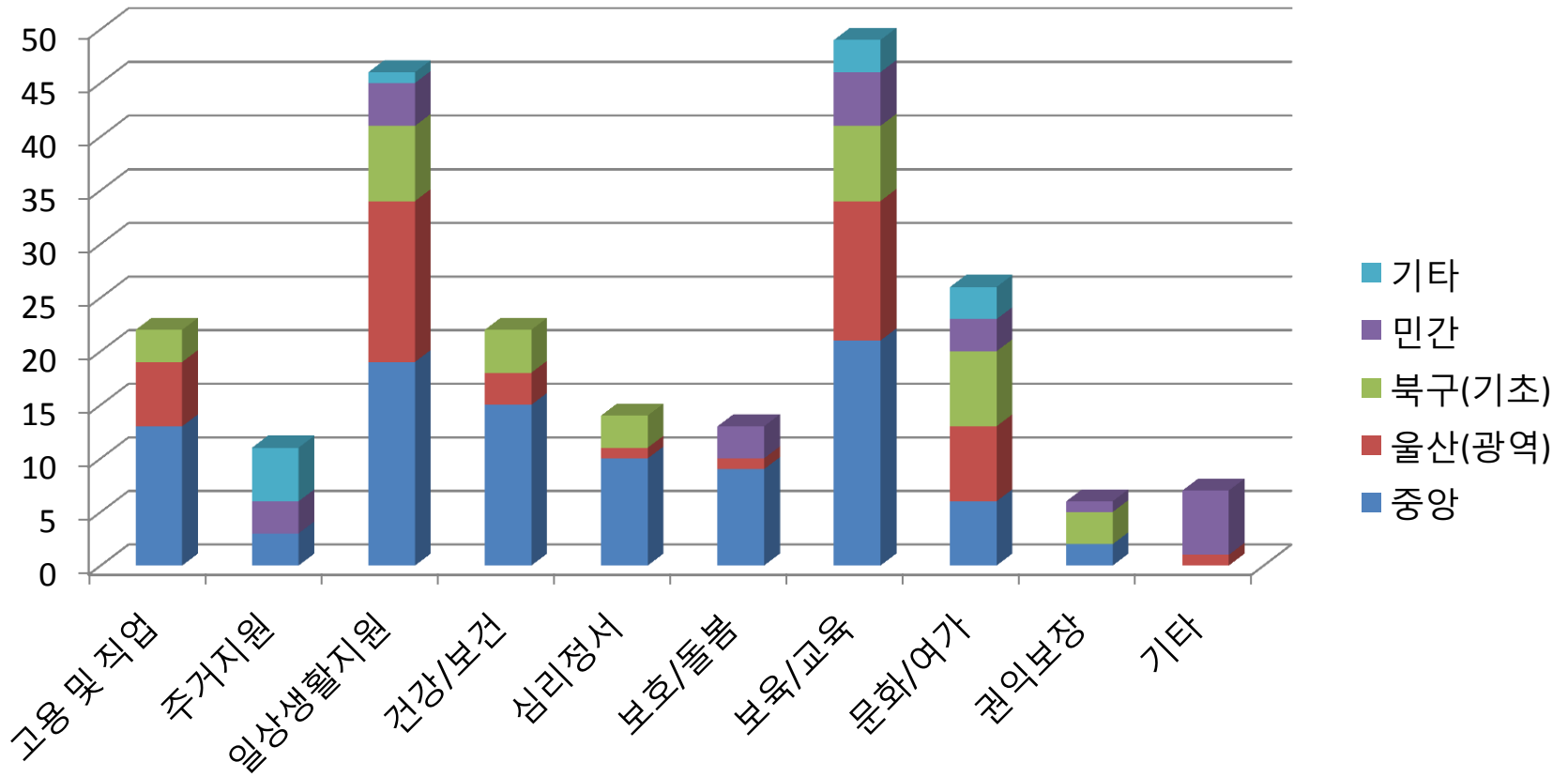
사업 내용별 예산

단위: 백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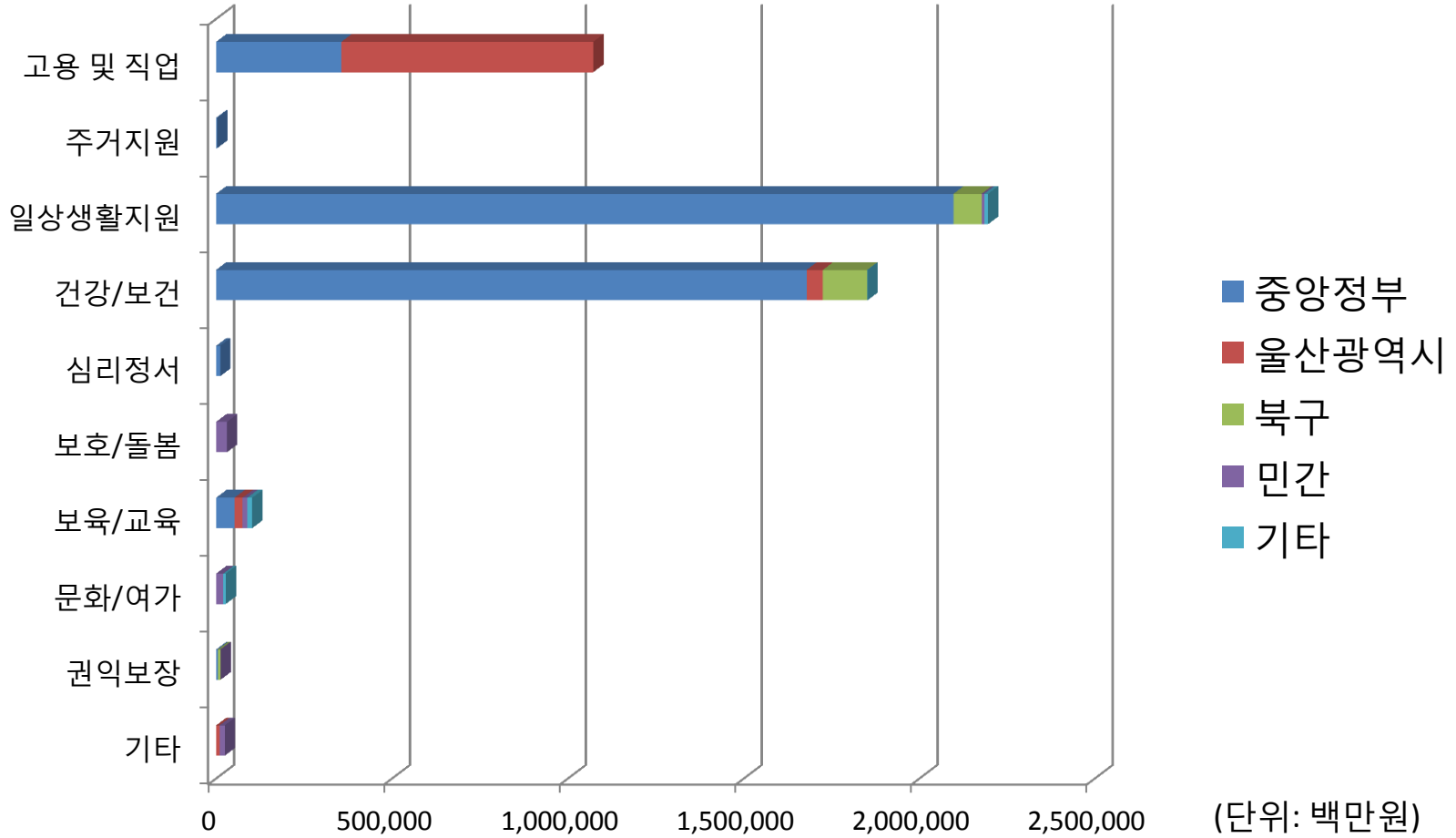


사업 내용별 사업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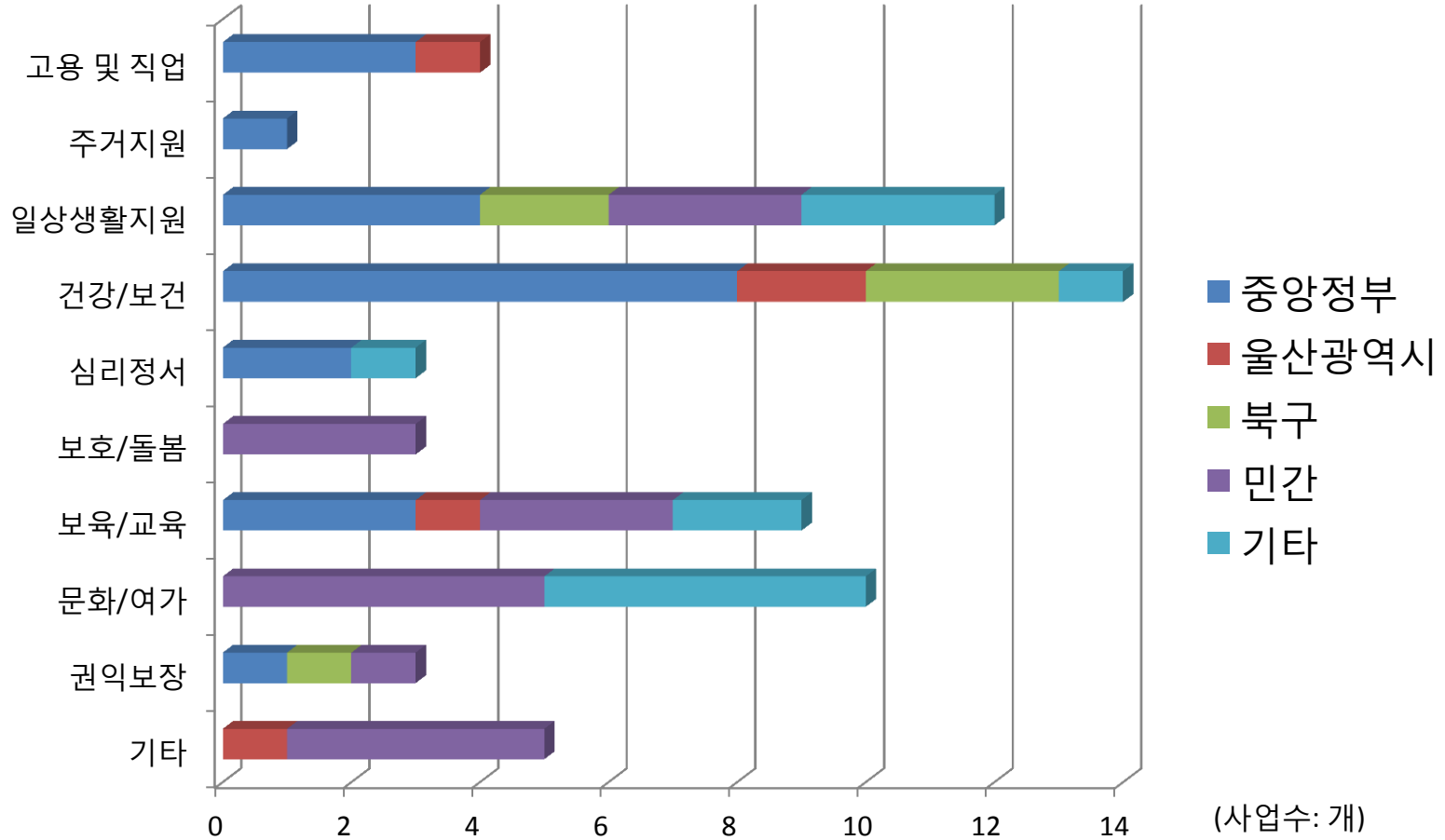
사업수



장애인 사업: 내용별 예산



장애인 사업: 내용별 사업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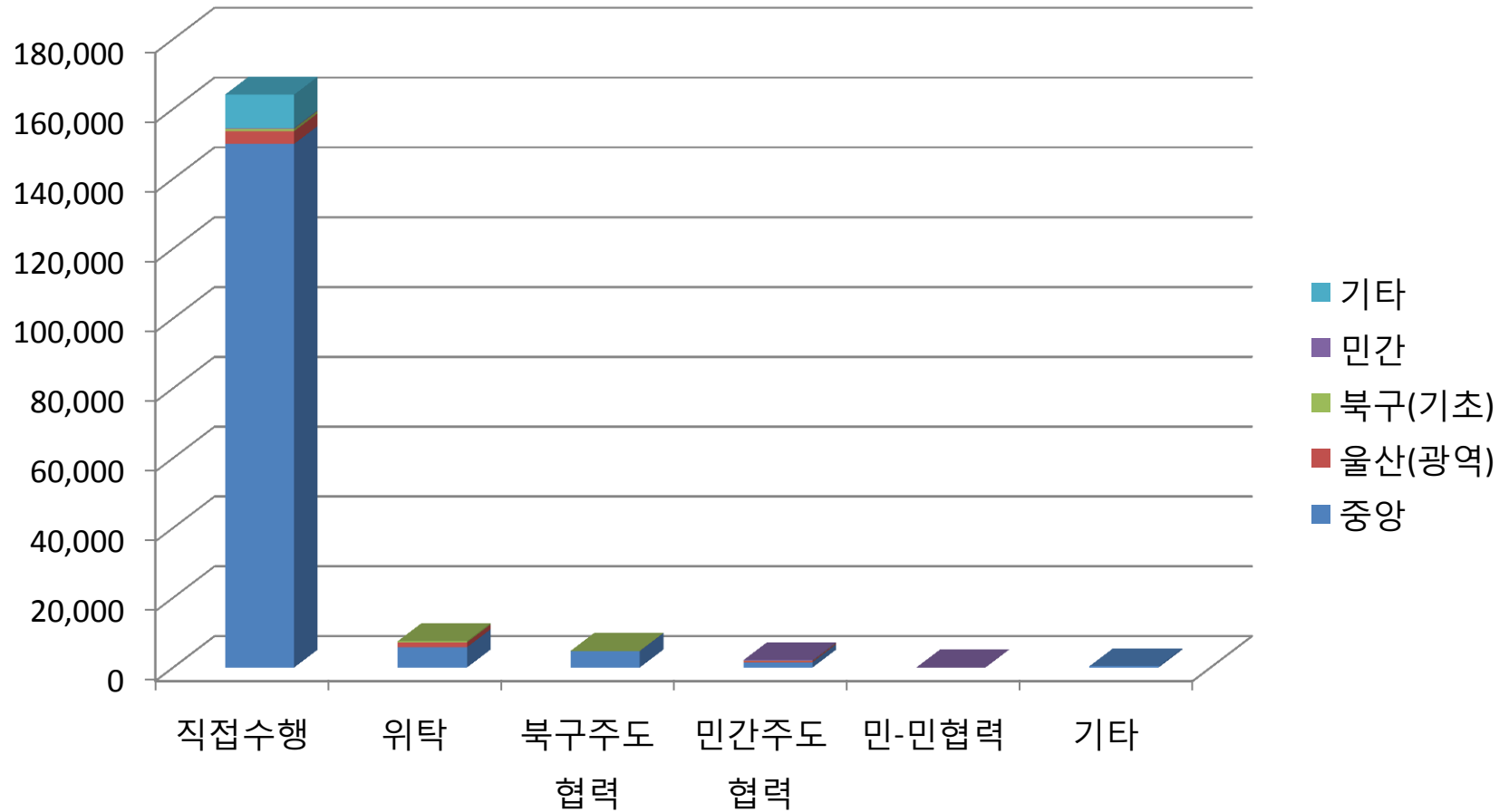


사업수행방법에 따라

- 직접수행
 - 사업의 수행방법으로는 주관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임.
 - 특히, 사업의 수행방법과 기준이 명확한 중앙정부 사업의 경우 공공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고, 기타(교육청)의 경우도 직접 수행하는 비중이 높았음.
- 협력
 - 타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거나,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사업비의 비중은 높지 않았음.
 - 공공이나 민간 주도의 협력 사업은 사업비 뿐만 아니라 추진 사업의 수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 하지는 않았음.
- 복구청 사업
 - 복구청 자체사업 중에서는 직접 수행하는 사업과 위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수가 비교적 많은 편이었음.
 - 양적으로는 직접수행 사업의 수가 많았지만, 예산은 위탁의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의 비중이 높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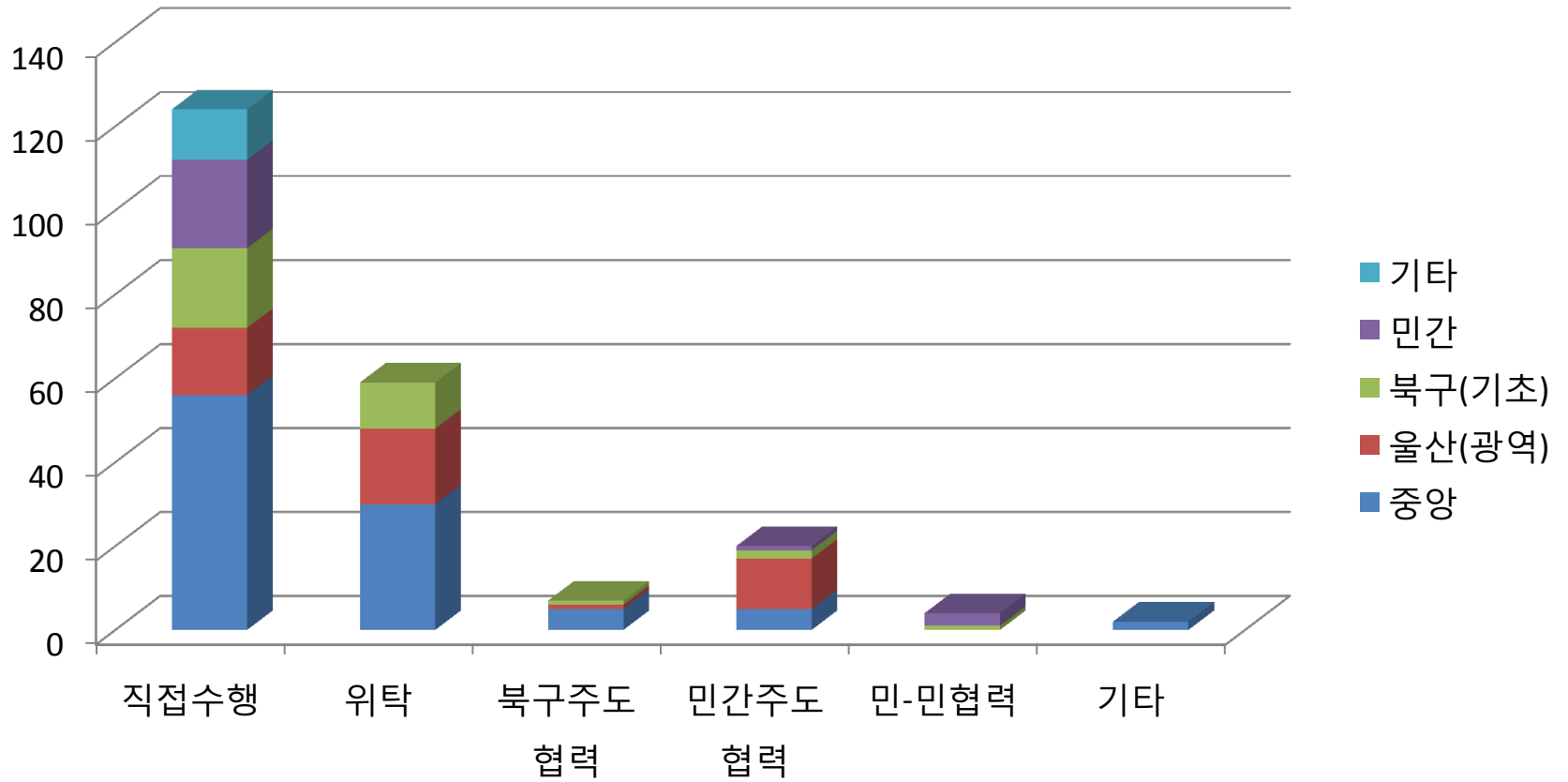
수행 방법별 예산

단위: 백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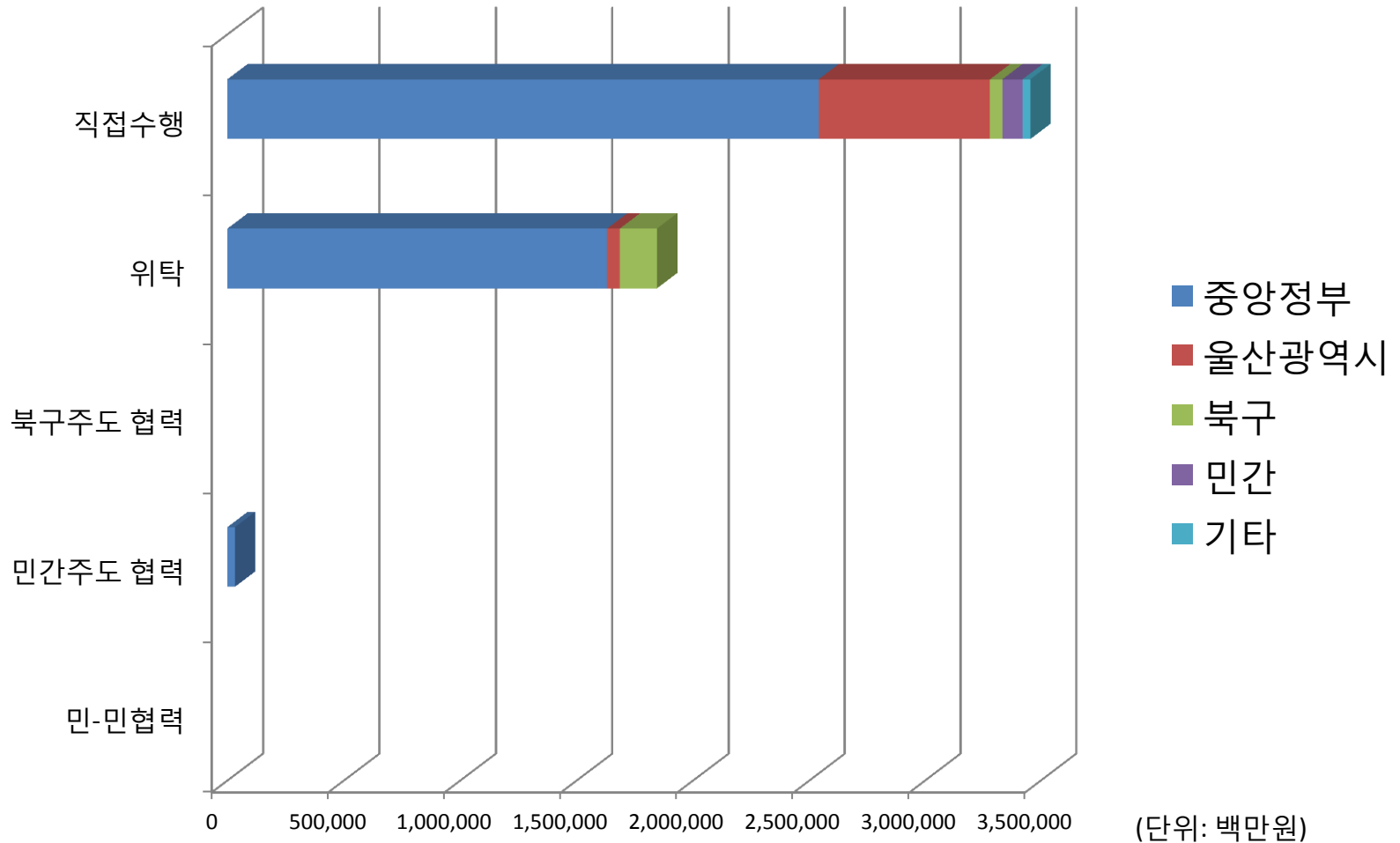


수행 방법별 사업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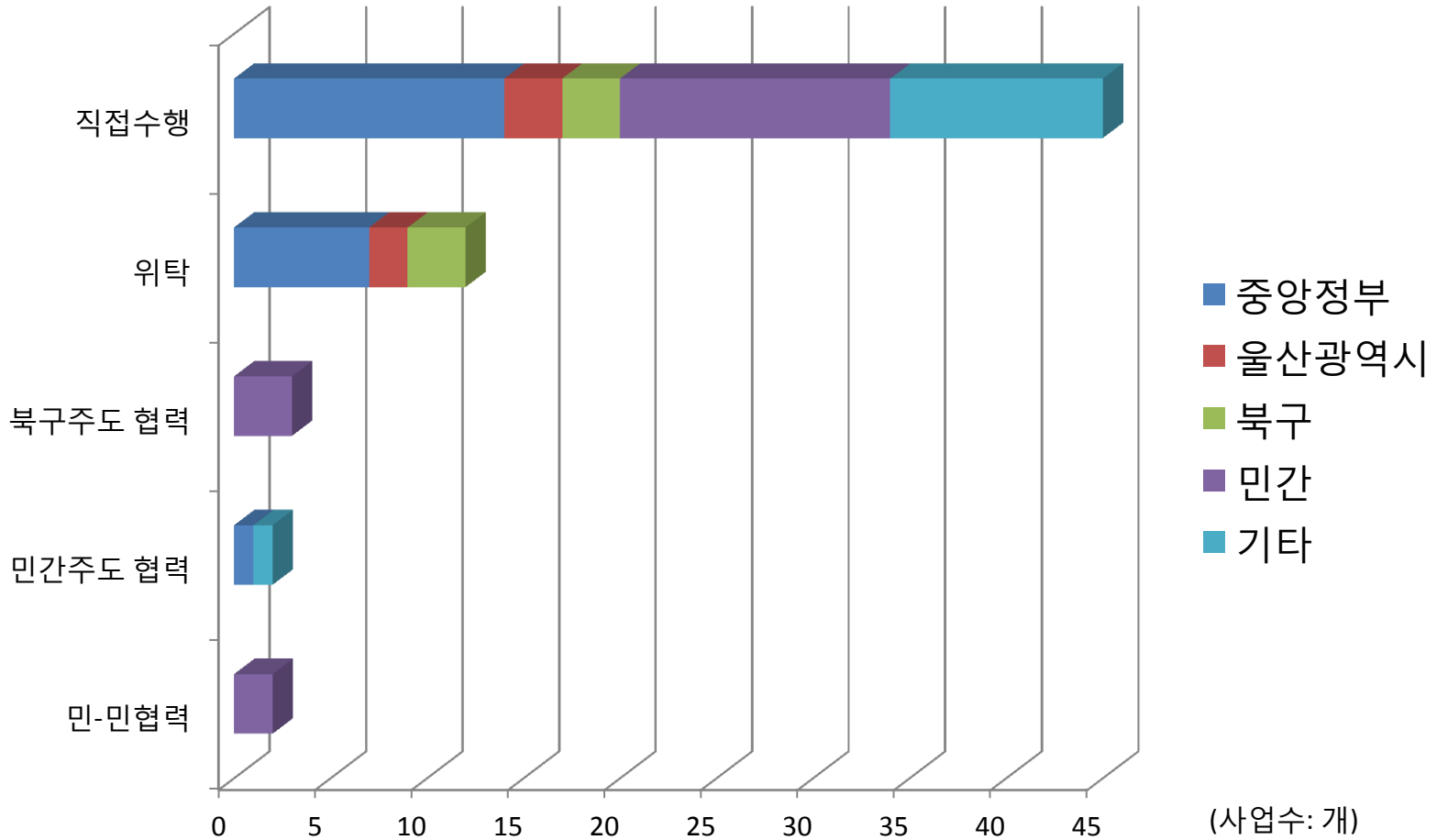
사업수



장애인 사업:수행 방법별 예산



장애인 사업:수행 방법별 사업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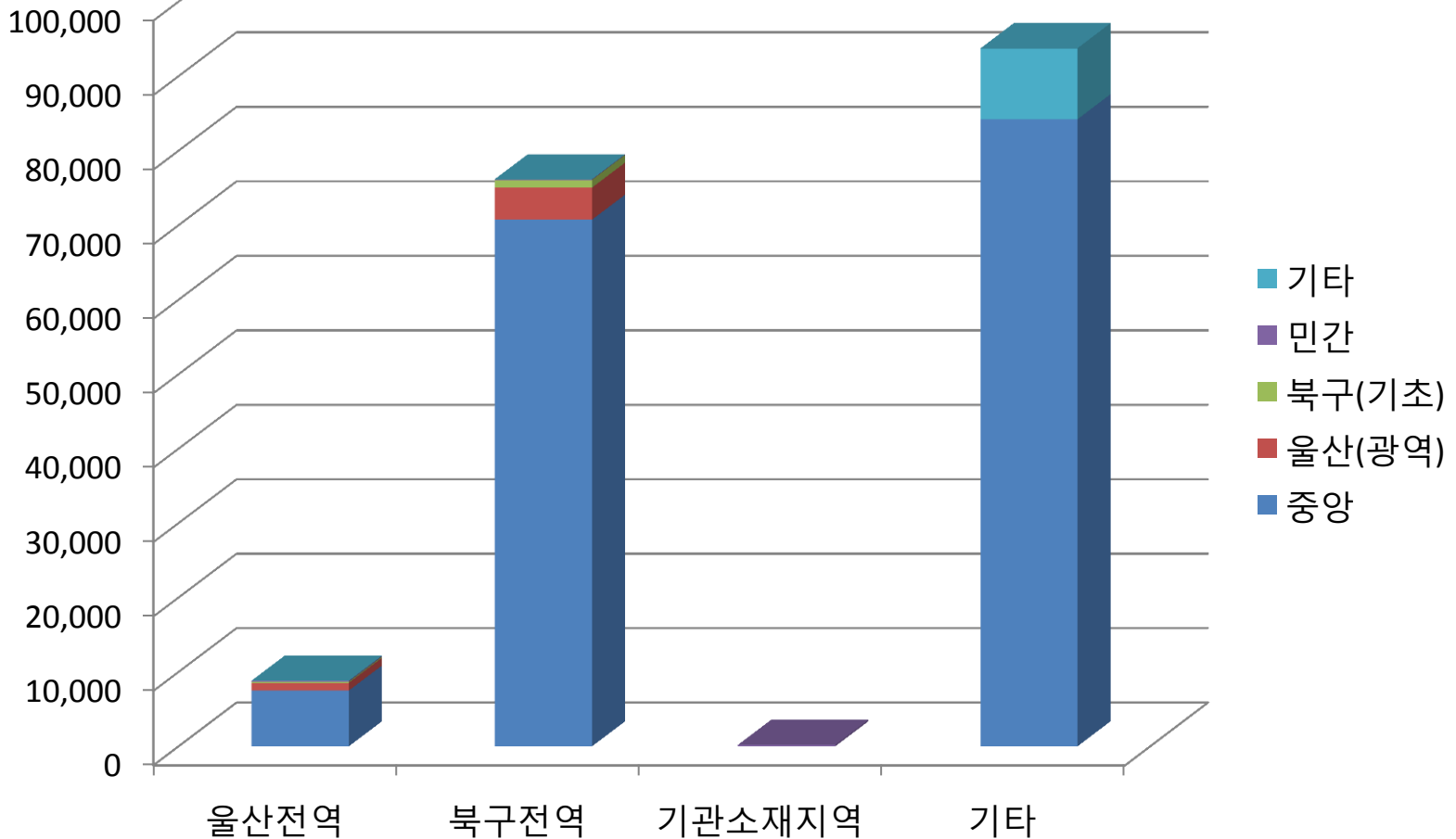


서비스 대상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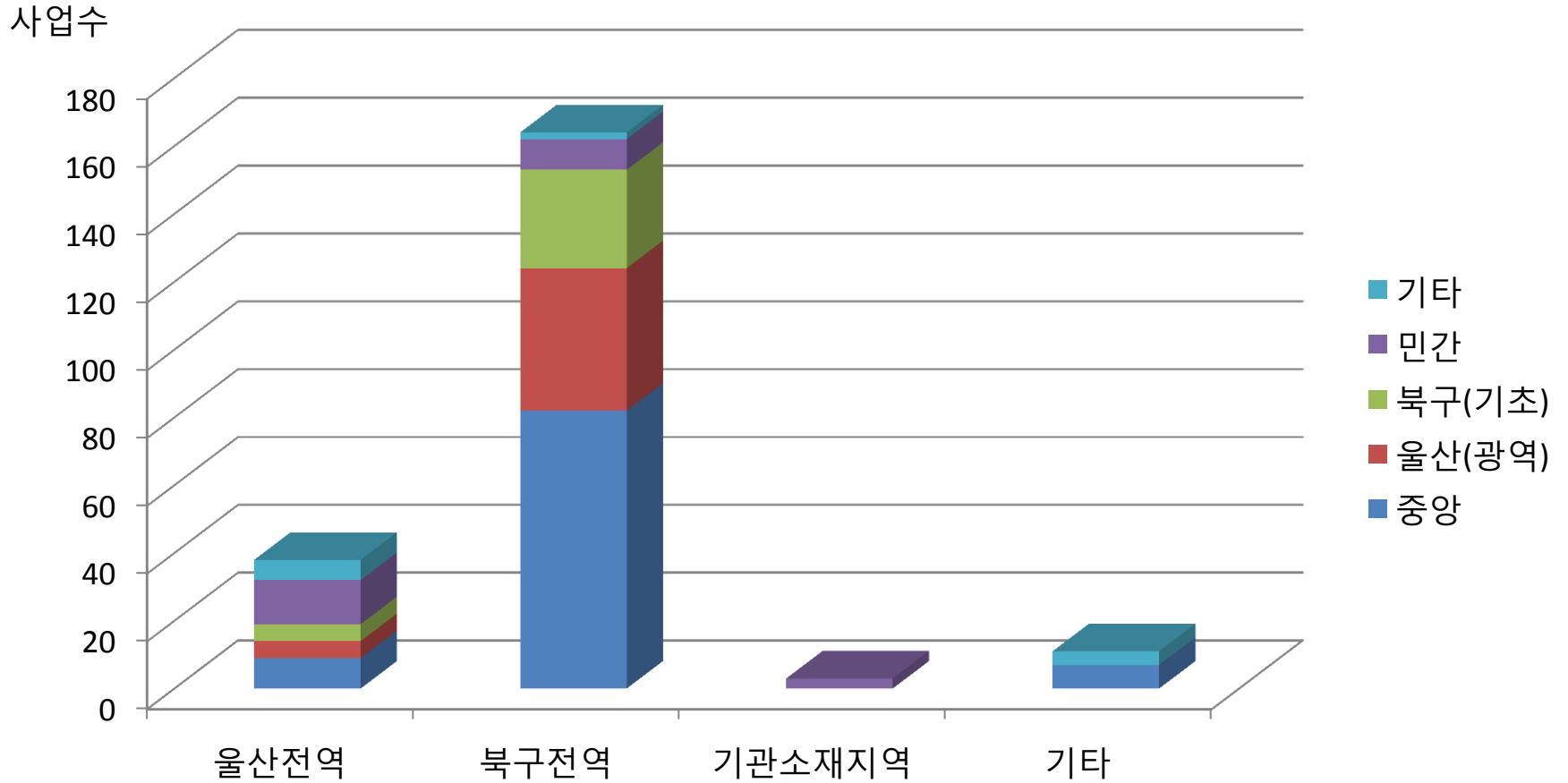
- 서비스 대상지역은 예산과 사업수 모두 복구 전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비중이 많았음.
- 실질적으로 예산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‘기타’유형이었지만, 이 중 대부분은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청 사업으로 복구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.
- 복구청 사업 중에서도 복구청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 울산 전역을 서비스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사업이 일부 있었지만, 대부분은 복구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.
- 흥미로운 것은 울산광역시의 사업 중에서도 복구지역을 주된 서비스 지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의 비중이 적지 않았음.
 - 절대적인 사업수만 비교해보면 복구 자체사업보다 많았음.
 - 하지만, 예산의 규모는광역시의 사업이 더 컸음.

대상 지역별 예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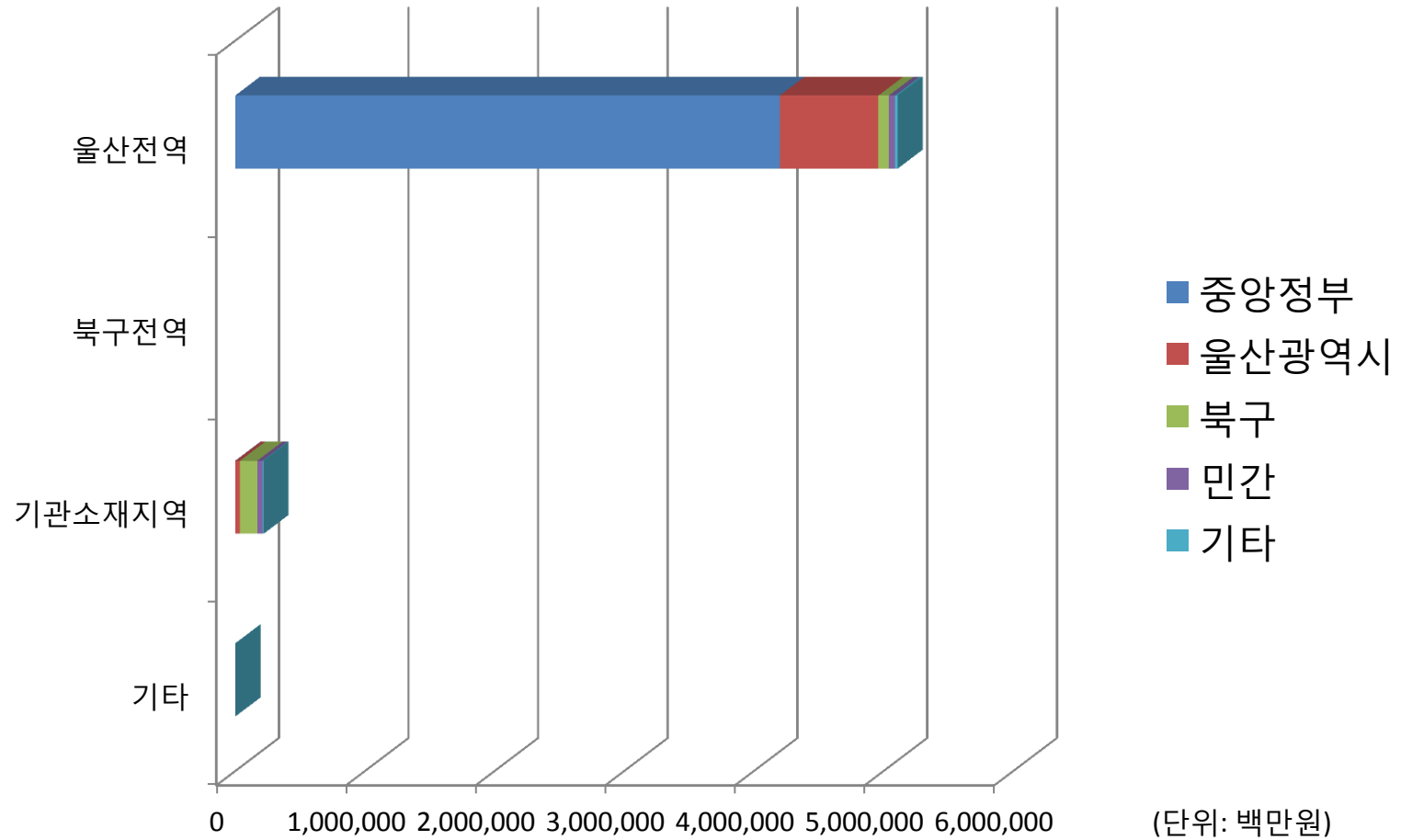
단위: 백만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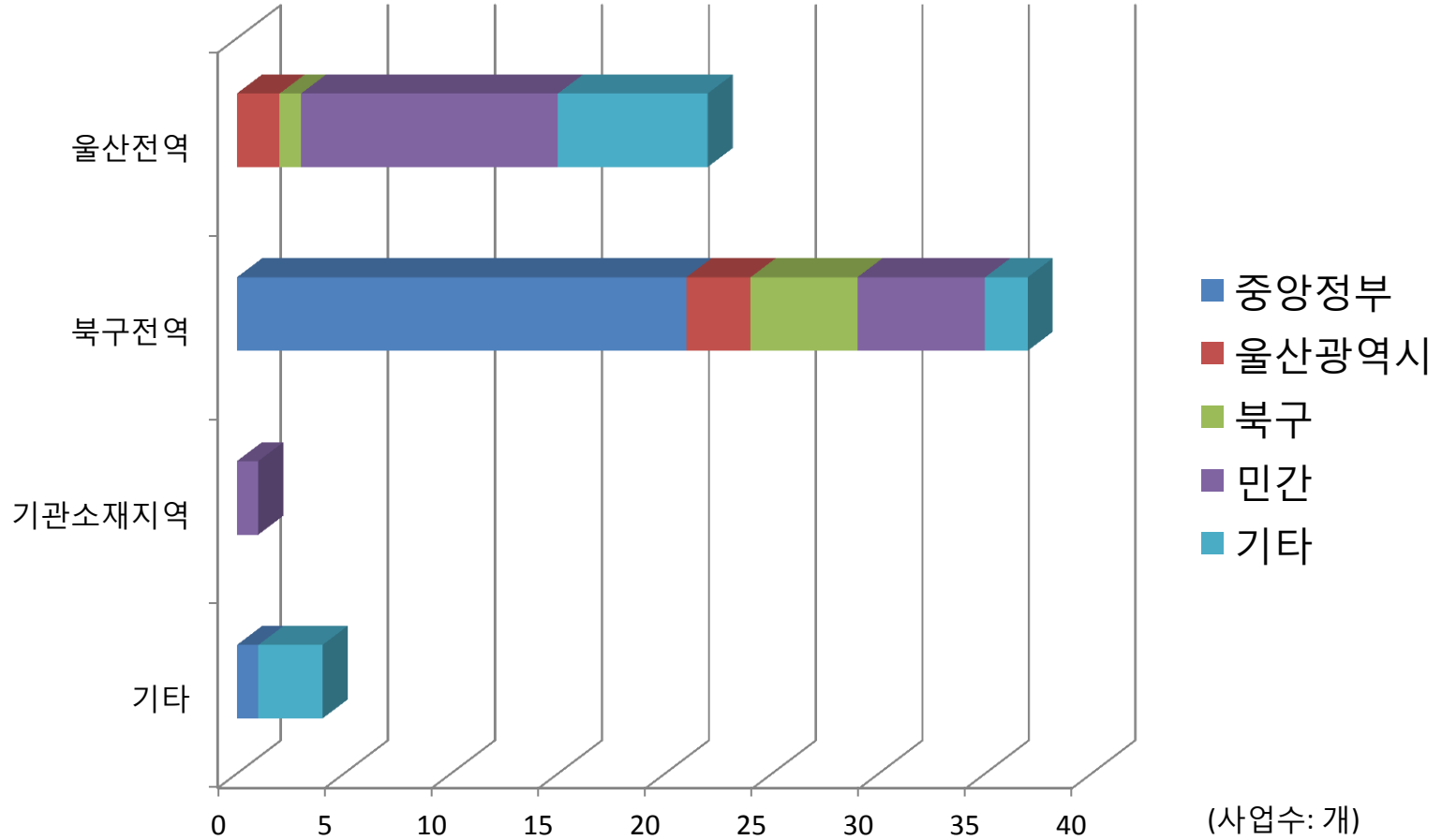
대상 지역별 사업수



장애인 사업: 대상 지역별 예산



장애인 사업: 대상 지역별 사업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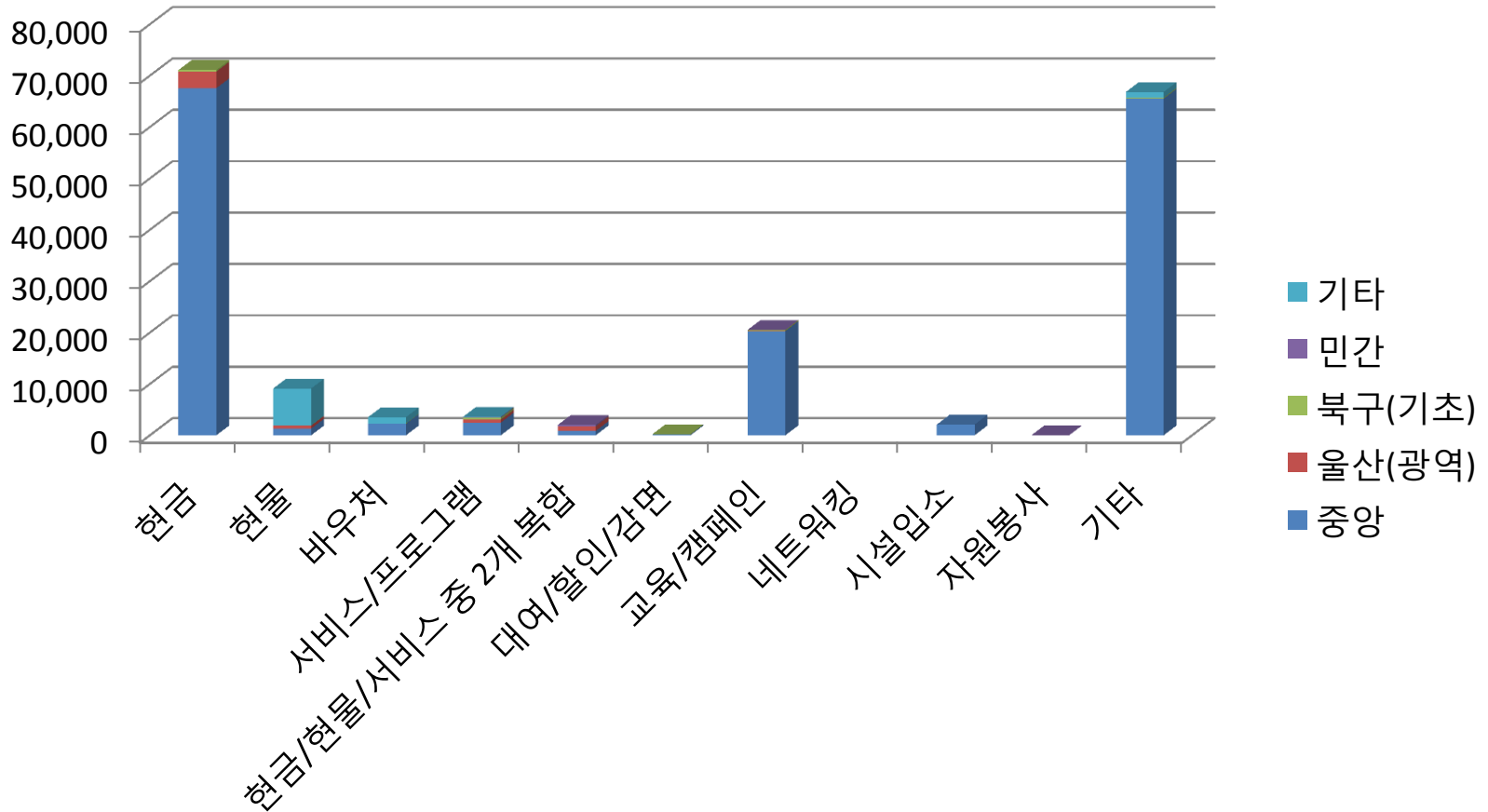


제공 서비스 형태에 따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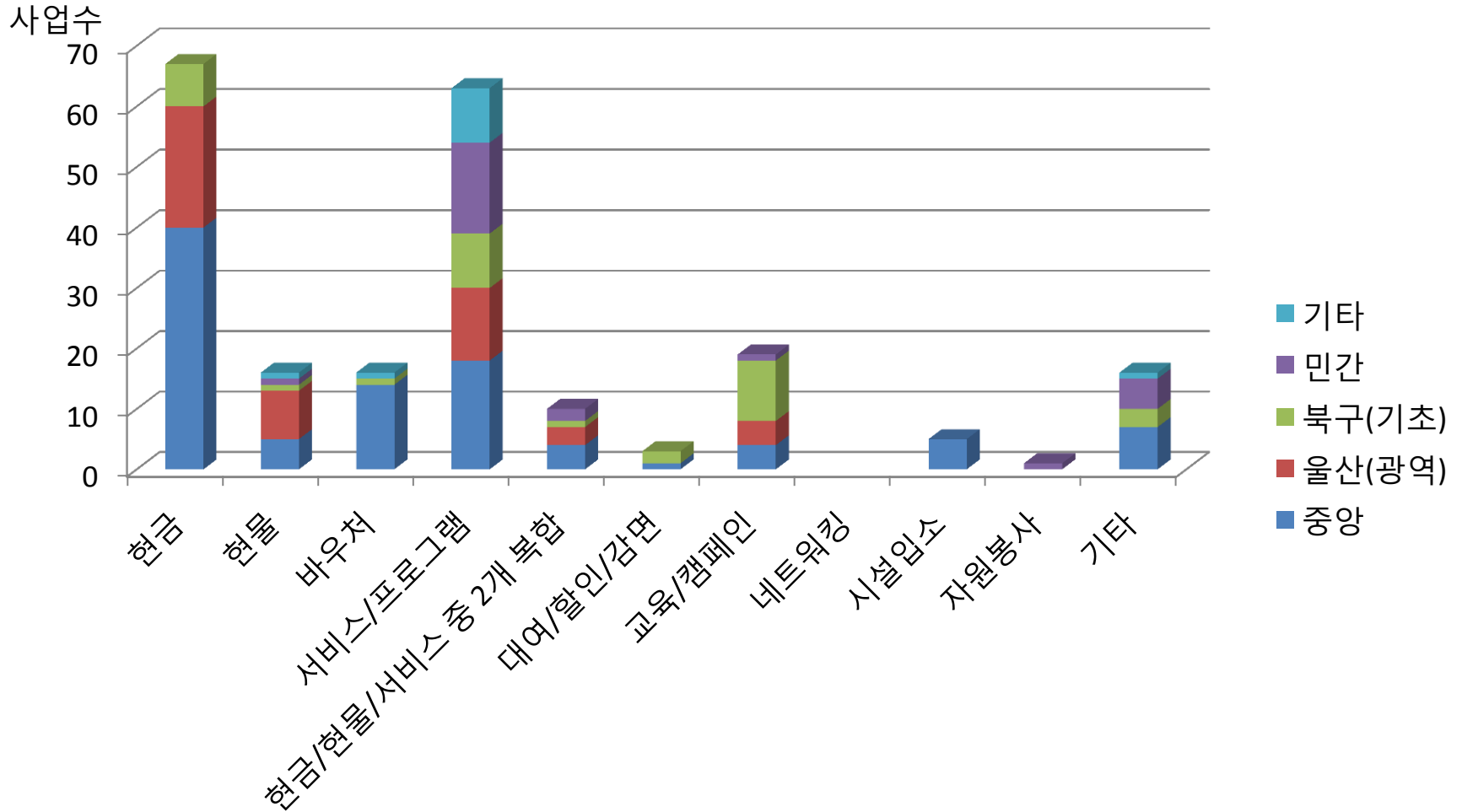
- 예산
 - 현금지원성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음
 - 현금 지원성 사업을 제외하면, 교육/캠페인 사업과 현물 지원성격의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비중이 높았음.
 - 바우처, 서비스/프로그램은 비슷한 수준을 보였음.
- 사업수
 - 사업수 역시 현금지원성격의 사업이 가장 많았음.
 - 서비스/프로그램 사업도 사업수는 매우 많았음.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.
- 복구청 자체사업
 - 복구청 자체사업은 교육/캠페인 성격의 사업이 가장 많았고, 서비스/프로그램, 현금지원 성격의 사업이 비슷한 규모로 나타났음.
 - 하지만,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많지 않았음.

서비스 형태별 예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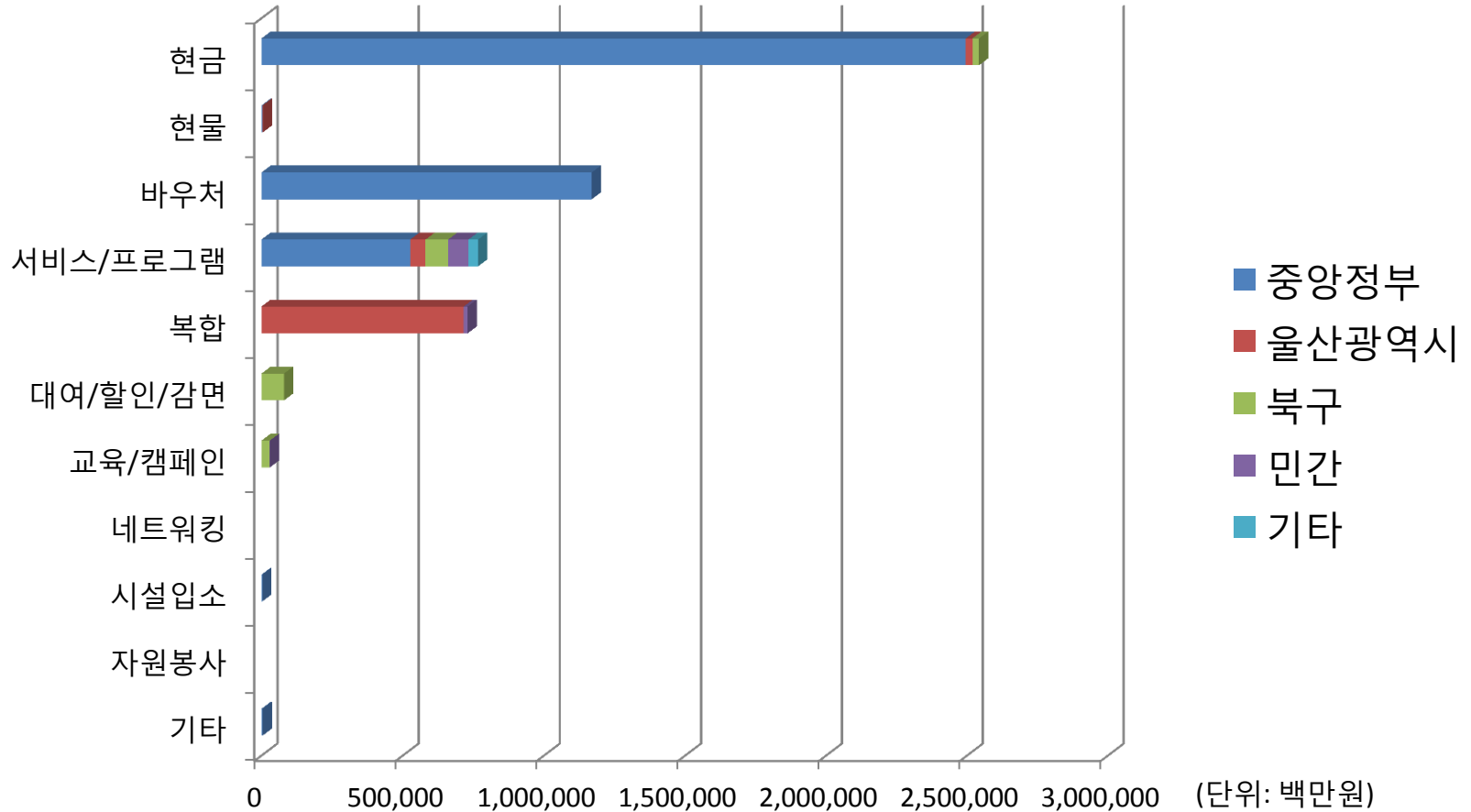
단위: 백만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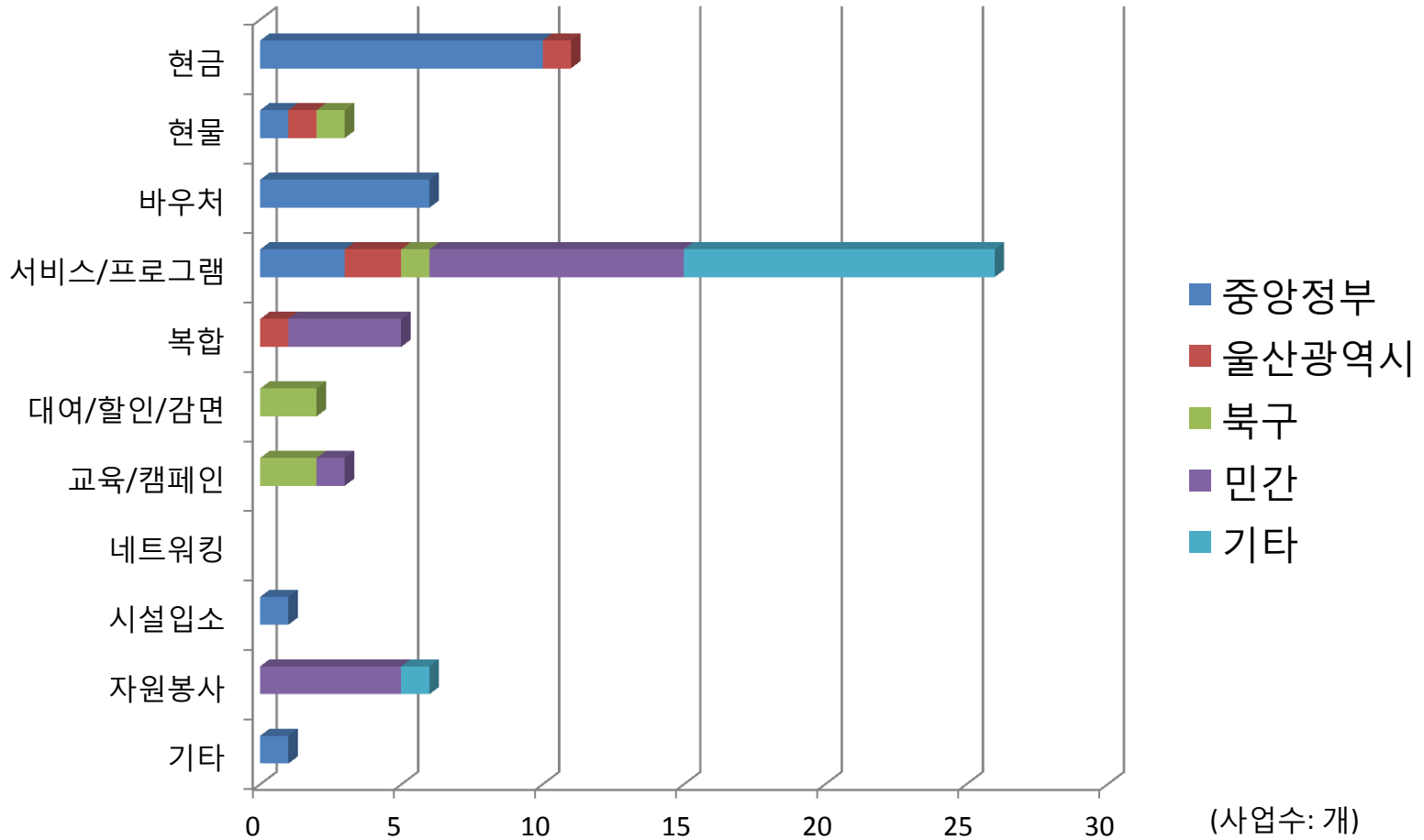
서비스 형태별 사업수



장애인 사업: 서비스 형태별 예산



장애인 사업: 서비스 형태별 사업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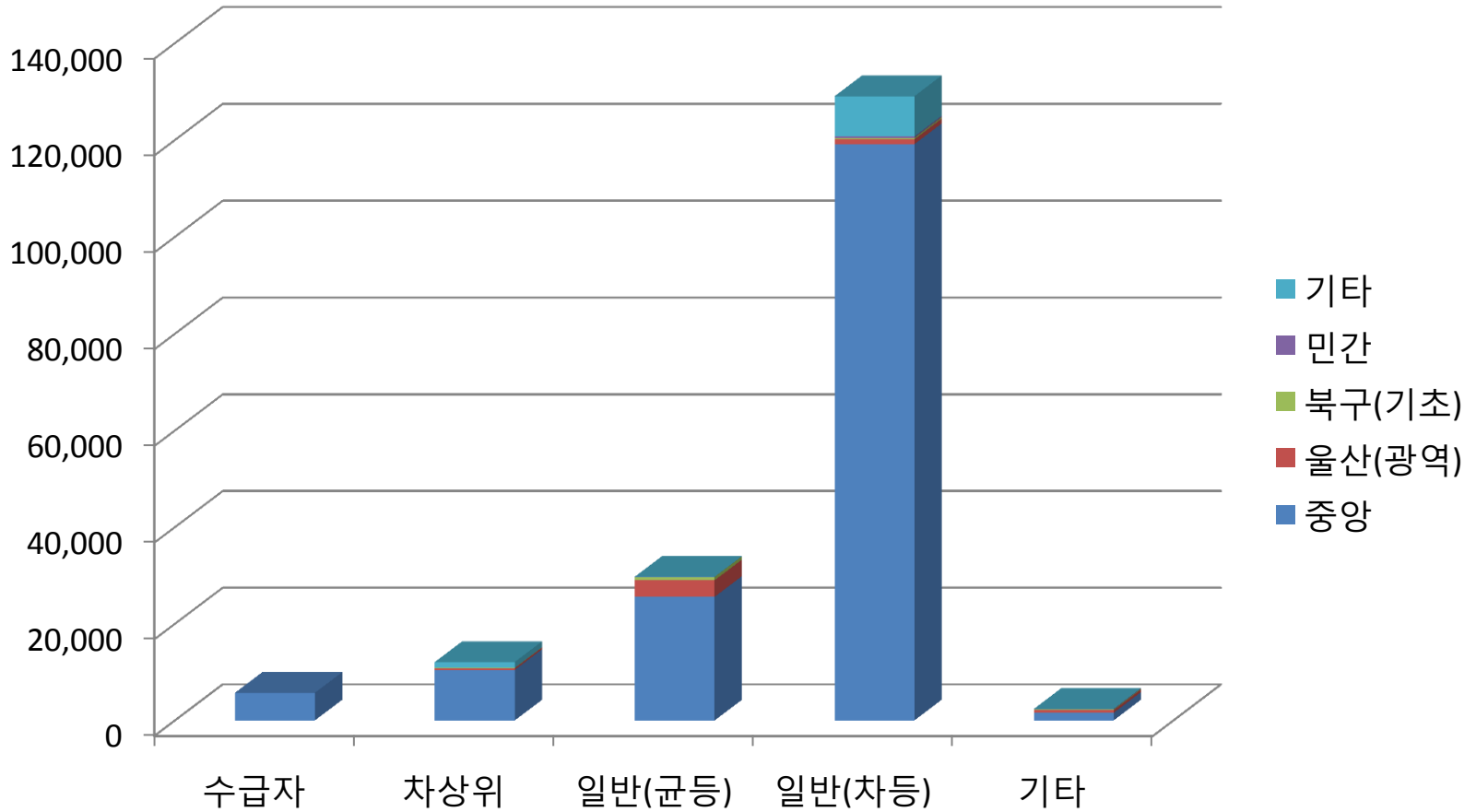


소득수준에 따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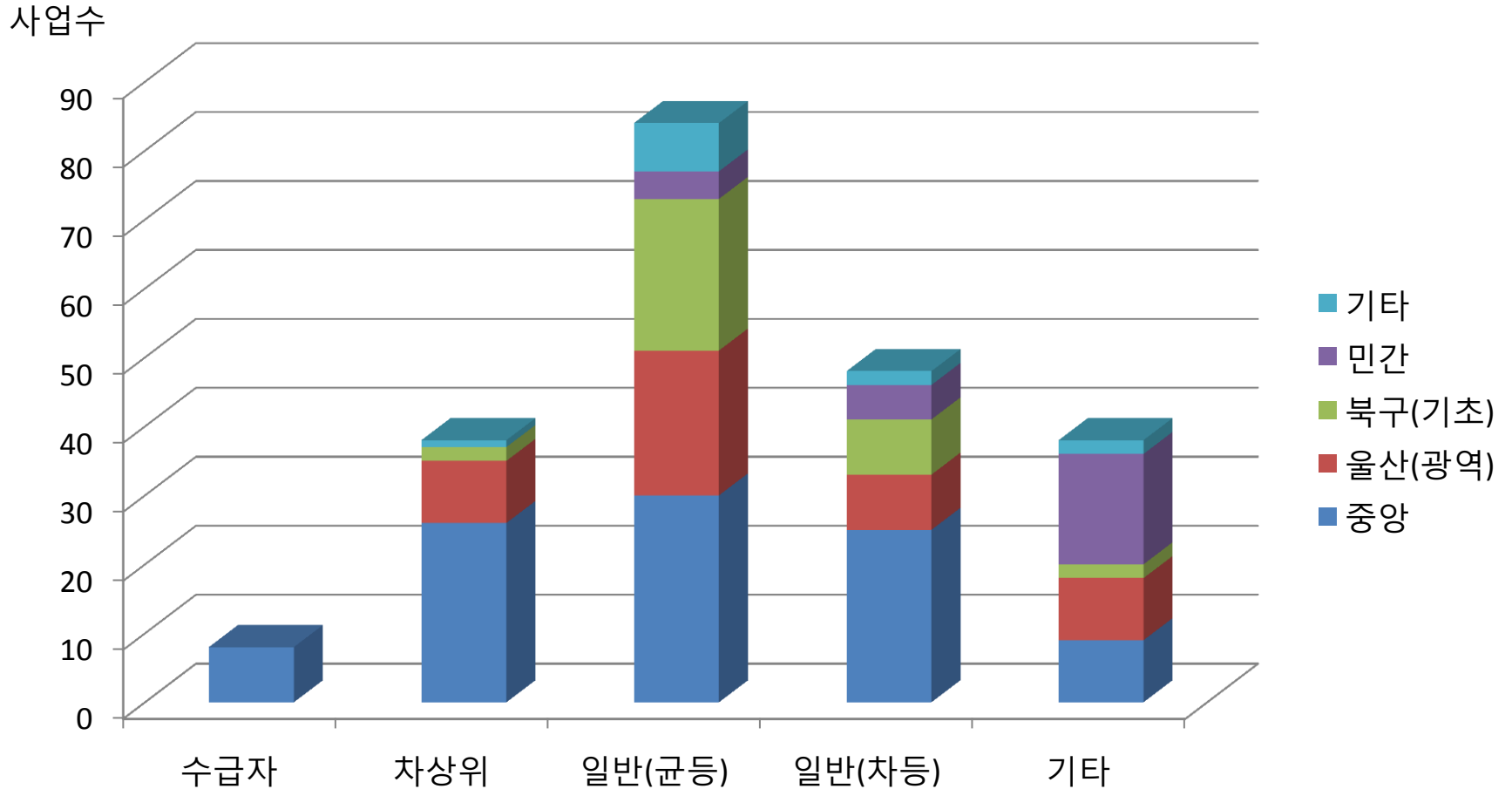
- 소득수준에 따른 사업 분포는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, 이번에는 일반대상자에게 균등한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업과 차등 부과하는 사업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음.
- 양적으로는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이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의 비중이 가장 많았음. 하지만, 투입 예산의 측면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자격이나 비용을 다르게 적용하는 사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음.
- 복구청 자체사업
 - 복구청 자체사업은 예산과 사업수 모든 측면에서 모든 주민에게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보편사업의 비중이 높았음.
 -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거의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.

대상자의 소득수준별 예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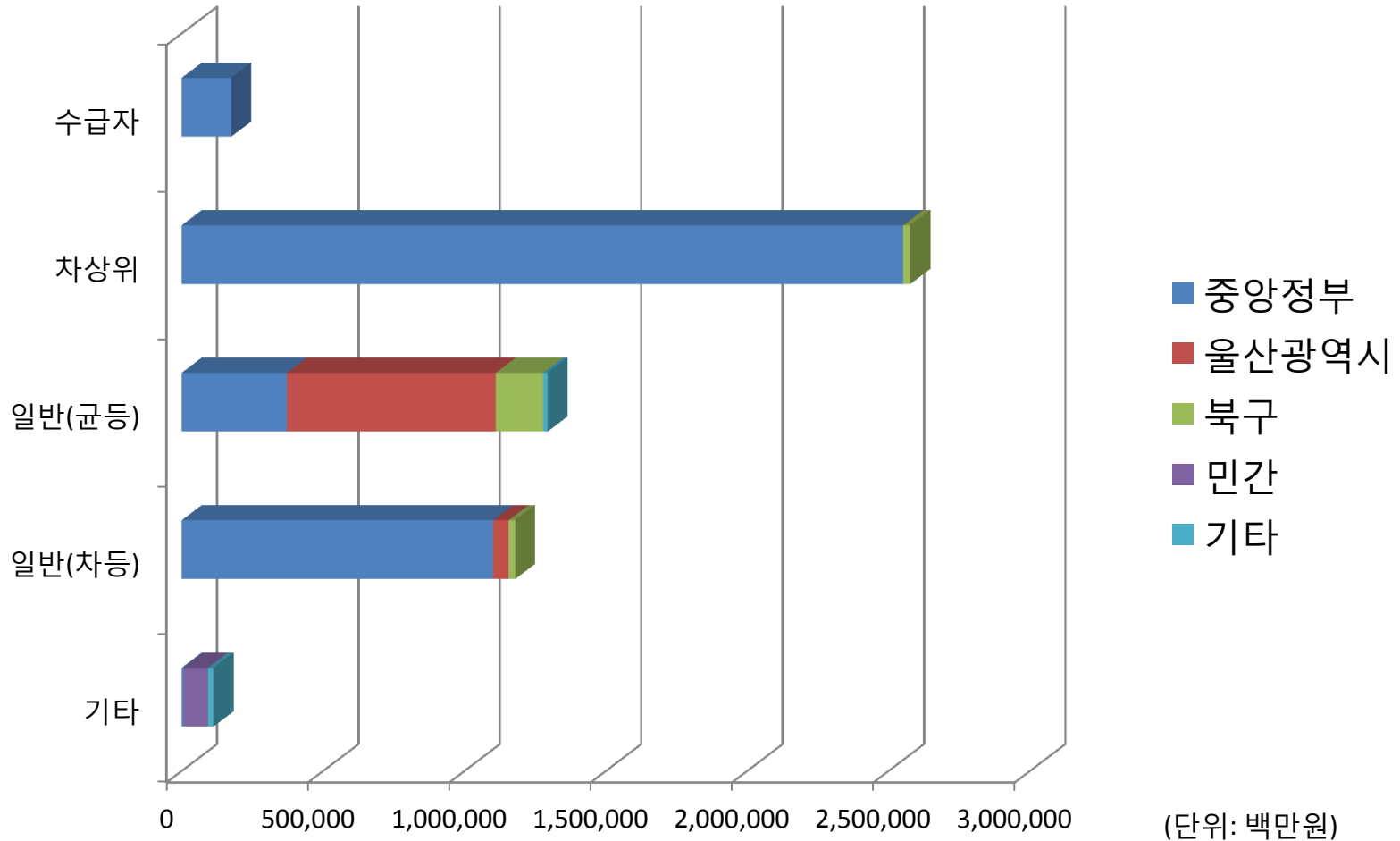
단위: 백만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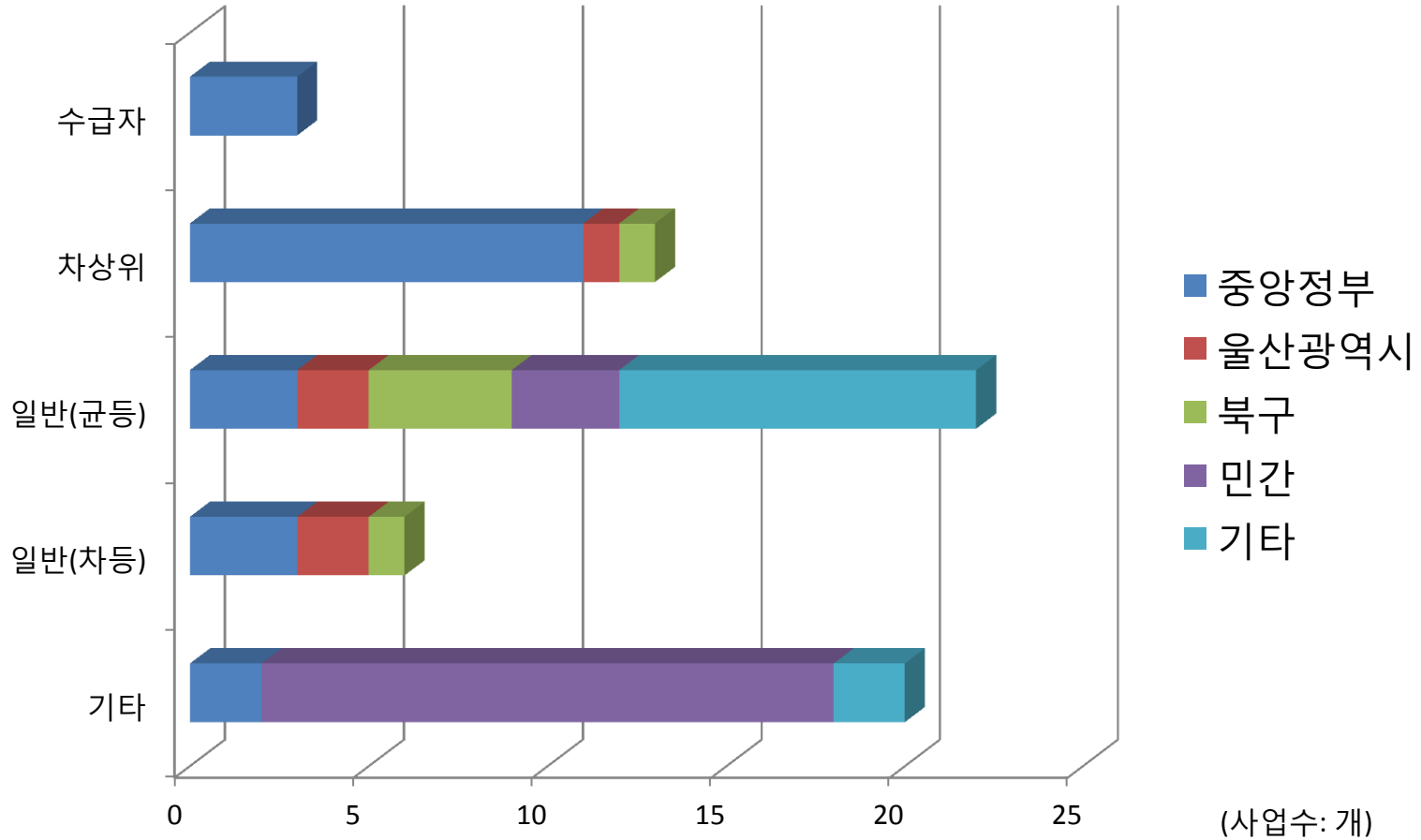
대상자의 소득수준별 사업수



장애인 사업: 소득 수준별 예산



장애인 사업: 소득 수준별 사업수



결론 및 제언

- 보편적 복지사업의 강화
 -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중앙정부의 사업이 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동일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중복하여 실시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음.
 - 복구청 자체사업 중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. 하지만, 이것이 목적의식적인 사업 운영의 결과인지 우연한 결과인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.
 - 저소득계층의 비중이 낮고,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편적인 복지사업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.

결론 및 제언

- 사각지대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 강화
 -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저소득 계층의 문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임.
 - 중앙정부의 제도로 모든 사각지대의 저소득 계층을 포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초단체 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 - 일반 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사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각지대의 저소득 계층을 표적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결론 및 제언

-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
 -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수는 많지만, 투입 예산은 많지 않음. 상대적으로 노인사업은 사업수는 적지만 투입 예산은 많음.
 - 북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장애인구의 비중이 노인인구의 비중보다 높은 지역임.
 -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수와 예산이 인구집단별 상대적인 욕구의 크기와 비교하여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
 - 장애인 대상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림으로써 사업을 내실화 하고, 사업수와 투입 예산의 균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.

결론 및 제언

- 서비스 사업 예산 확대
 -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금, 현물 지원 사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.
 - 현금, 현물성 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, 이들을 제외하면 교육과 캠페인 성격의 사업 비중이 높음.
 - 반면 서비스/프로그램은 사업의 수는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, 상대적으로 예산은 매우 미미한 수준임.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서비스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